

보도시점 (온라인) 2026. 9. 18.(금) 12:00
(지 면) 2026. 9. 19.(토) 조간

8월 호우 피해 이재민, 추석 전 주거 안정 총력 지원

- 단전·단수 공동주택 복구 마무리로 일시대피자 대부분 추석 전 귀가
- 사면 유실, 주택 파손 등 장기 대피 107세대에는 월세 및 체재비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파손되거나 공동주택 단전·단수로 집을 떠나 있는 이재민과 일시대피자가 추석 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귀가 지원과 장기 대피 세대 주거 안정 지원을 추진한다.

8월 호우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등에서 2,895세대 6,176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9월 16일 기준 127세대 226명이 경남 거제시 등 4개 시도 7개 시·군·구의 민간 숙박시설과 친인척집 등에 머물고 있다.

주택 침수나 공동주택 단전·단수로 대피한 일시대피자는 현장 복구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부분 귀가를 완료하였다.

다만 주택 파손 등으로 장기간 대피가 필요한 거제시와 통영시 107세대 이재민에게는 지방정부를 통해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사면 유실로 공동주택 피해를 입어 대피한 거제시 54세대는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주거시설 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주택이 침수·파손된 거제시 31세대와 통영시 22세대는 월세와 친인척집 거주 체재비 일부를 지원한다. 친인척집에 머무는 세대가 월세 임대차 계약으로 변경 시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주거비 지원은 이재민이 빈집이나 빈방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청구하면 지방정부가 월평균 50만 원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

으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은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주택 복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공동주택 단전·단수 등으로 대규모 일시대피자가 발생한 거제시와 통영시에 생수 등 구호물자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지원했고, 재해구호기금 등을 통해 일시대피 주민의 숙박비와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을 확정하고 복구비 총 2,308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수전설비 침수로 단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수전설비 교체·수리 비용 일부(60억원)를 지원한다.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추석을 조금이라도 편히 맞으실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호우로 집을 잃고 상심이 크신 이재민께서 명절을 앞두고 더 큰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지방정부의 구호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라며, “추석 전에 한 세대라도 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를 서두르고, 장기 대피가 불가피한 세대는 주거비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재난복구지원국 재난구호과	책임자	과 장	정종율 (044-205-5330)
		담당자	사무관	김성경 (044-205-5331)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종빈 (044-205-5310)
		담당자	사무관	문균호 (044-205-5314)

